

내년예산 역대 최대 확보 총력

최정호 도 정부부지사

기재부 주요예산 부서 방문

전북 현안사업 반영 건의

전북도가 외부환경 변화에 취약한 기존 주력산업 체질개선과 지속성장이 가능한 미래성장동력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 주요 예산부서를 집중 공략하는 등 2019년 국가예산 역대 최대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도 2019년 국가예산 부처별 예산액은 전년대비 6,417억원이 증액된 6조 2,954억원으로, 사상 처음 부처단계에서 6조원대를 확보하여 전북 대도약의 발판을 구축하였으나 국가예산 확보여건은 여전히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요구한 분야별 총액 규모를 살펴보면 전북도에 영항이 큰 SOC, 농림, 환경, 문화분야가 감액요구된 상황으로 기재부 단계서 주요예산 증액을 위한 발 빠른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최정호 정부부지사는 18일 전북도 현안사업과 밀접한 기재부 주요예산 부서를 방문하여 부처별 현안사업 삭감방지와 GM군산 폐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현실을 상세히 설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소·미반영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을 적극 전개했다.

먼저 기재부 장운정 연구개발예산과정을 방문하여, 전통적 부품생산기업의 사업전환과 패스트 실증트랙 플랫폼 적용을 통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부품업체를 미래차 핵심부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미래차 핵심부품 사업전환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19년 국비 220억원 반영 필요성을 적극 요구했다.

기재부 신상훈 국토교통예산과장, 이상영 산업정보예산과장을 차례로 만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신공항 수요조사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사전타당성 용역 신속 추진과, 공기단축을 위한 예타면제를 건의했다.

또한 2023새만금세계잼버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참가자(역대 최대 규모인 168개국 청소년 등 5만여명 참가) 이동 필수요건인 도로SOC 조기 구축과 새만금 내부개발 가시화를 위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동서 남북도로 건설 등 새만금 SOC 5개사업 국비 5,370억원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전북도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9월 2일까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휘부 및 실무별로 기재부를 대상으로 전방위 활동을 추진하고 아울러 정치권, 시군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2019년 국가예산 역대 최대 확보를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화마가 심한 클럽 내부. 지난 17일 군산시 잠미동에 위치한 한 7080클럽에서 일어난 방화사건에 대한 경찰,소방 관계자들의 현장점검이 18일 실시된 가운데 과학수사대와 화재조사반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 어촌분야 157억 공모 선정

도, 부안 격포항권역 등 3곳

전북도는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하는 어촌분야 내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도내 마을 3개소가 최종 선정됐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지난 1월 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 증대를 위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1개소(부안 격포항 배후마을역),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4개소(고창 용기, 부안 유유·치도, 진서마을) 등 총 5개소가 공모를 신청했다.

전북도 자체평가(2.22)와 해양수산부의 발표평가(3.22, 4.11)·현장평가(4.19)를 거쳐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은 부안군 격포항 배후마을권역이,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에는 고창군

용기마을, 부안군 유유마을이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부안군 격포항 배후마을권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104억원을 투자하여 권역 가로환경 정비, 권역 쉼터 정비, 안전 재해시설 설치 등 기초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SEA FOOD거리, 테마길(시의거리), 권역 입구경관조성, 식당, 카페, 기념품샵 등을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 및 지역경관개선, 지역주민 역량강화 사업이 추진된다.

고창군 용기마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33억원을 투자하여 정보통신기반 주민체감형 가가호호 마을방송시스템, ICT융합 다목적 버스승강장 등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고, 특산물판매 및 로컬푸드 체질강,

갯벌생태 뉴시공원 조성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 및 미망사인 찾아가는 길 등 지역경관개선사업, 지역주민 역량강화 사업이 추진된다.

부안군 유유마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20억원을 투자해 휴(休) 마당, 여락문화관 등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참뽕테마거리 조성을 통한 지역경관개선사업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 사업이 추진된다.

도 강승구 농축수산물품목장은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속발전 할 수 있는 활력 넘치는 어촌마을이 조성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람 찾는 어촌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군산 유흥주점 화재

靑 국가위기관리센터 가동

청와대는 33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유흥주점 화재 사건을 보고 받고 즉각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가동해 상황을 대응 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관련기사 4면·15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재가 전날 오후 9시50분경 발생했고,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오후 10시10분경 관련 보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11시 이후부터 사상자에 대한 보고가 들어왔고, 새벽을 거치면서 사상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위기관리센터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다"며 "새벽부터 현재까지 위기관리센터가 상황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뉴스

신(新) 북방정책 로드맵 윤곽

남북에 이어 러시아까지

중·러와 동북아 네트워크 구축

문재인정부의 '신(新) 북방정책' 로드맵이 공개됐다.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라 남북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까지 아우르는 초국경협력 사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신 북방정책 전략과 중점과제', '한·러 혁신플랫폼 구축 계획 및 운영방안' 등 2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북방위는 올해 초부터 관계 정부 부처와 연구소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야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야별 전략과 중점과제를 검토했다. 각종 세미나와 민간위원의 토론을 거쳐 신 북방정책의 ▲4대 목표와 ▲14개 중점과제를 수립했다.

유라시아 복합물류망 구축
천연가스·철도연결 협력

4대 목표는 ▲소다자 협력 활성화를 통한 동북아 평화기반 구축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략적 이익 공유 ▲산업협력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인적·문화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등이다.

4대 목표를 실행할 추진 전략으로는 ▲상대국가와 신뢰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협력 ▲관련국가 및 국제기구 개발전략과 연계 ▲패키지 투자협력과 북방 네트워크 거점 확보 등이 있다.

이를 세분화 해 ▲유라시아 복합물류망 구축 ▲한·러 천연가스 협력 강화 ▲북극항로 진출로 해운·농수산·문화·체육·관광 협력 확대 등 14대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중국의 동북3성 진흥전략·신(新)동방정책, 러시아의 시베리아횡단철도(TSR)-남북한연결철도(TKR) 연결 구상을 모두 연계해 북·중·러 접경지역 경제 특구 개발을 이루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모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우선 목표다.

이를 통해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

둥, 북한 나선과 중국 후춘·하산을 연결하는 경제특구 개발은 물론 나선·하산 프로젝트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북방위의 구상이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여부에 따라 북한을 기점으로 하는 크루즈 상품 개발과 두만강 국제관광특구(후춘·하산·나선 특구) 개발도 추진 가능할 것으로 북방위는 보고 있다.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철도·해운 복합운송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기업의 다양한 물류수요를 충족시켜 나간다는 복안을 세우고 있다.

부산에서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까지는 해상으로 43~50일이 소요되지만 철도 복합 운송으로는 25~35일로 물류 운송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 철도와의 TSR 공급인하 등을 위한 공동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중국 정부와 협의해 TCR의 우리 기업 전용 블럭트레인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을 타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남북한 한반도 철도와 중국·러시아 대륙 철도 연결에 대비해 동해·북부선(강릉~제진) 복선의 조기 착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노무현·이명박정부에서 추진했다가 중단됐던 남북러 천연가스관 연결 문제 역시 한·러 정부 중심의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상업적 항로로써의 북극항로를 LNG쇄빙선을 활용해 개척하고, 내륙수로와 연계된 물류루트를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러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러시아의 원천기술에 우리의 ICT 응용기술의 결합,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의 창출을 모색한다는 게 북방위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극동 금융플랫폼 활성화, 한국형 보건의료시스템의 중앙아시아 확산, 극동지역 농업생산 기반 확대 지원, 문화·체육·관광 협력을 확대한다는 것도 세부 과제 안에 포함됐다. /뉴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